

목포 삼학도에 한국섬진흥원 설립

전국 6개 지자체와 경쟁 최종 선정 ... 정부 출연기관 올 8월 출범
3300여개 섬 연구·발전 정책수립 ... 전남, 섬 정책 메카로 발돋움

목포시 삼학도에 전국 3300여 섬에 관한 연구·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섬진흥원'이 오는 8월 설립된다. <관련기사 3면>
다도해(多島海)를 품은 전남이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섬 정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섬 지역 발전과 관광 등 각종 자원으로서의 섬 가치 증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한국섬진흥원 설립지목 포포시를 최종 결정했다. 설립지 공모에는 목포시와 인천 중구, 울진군, 충남 보령시, 경남 통영시, 남해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균형발전, 입지여건, 사업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포 삼학도를 선정했다.

목포시 선정 배경에는 일찌감치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정부에 최초 제안하고, 2016년부터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섬 정책 1번지로서의 굳건한 입지를 다져놓은 전남도와 목포시의 선견지명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3300여개의 전국 섬 가운데 64.5%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전남에 산재하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단체가 전남 서남권에 위치한 점도 낙점 배경으로 꼽힌다. 호남고속철,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광역교통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접근성도 뒷받침된다. 설립지 공모 과정에서 목포시와 함께 경쟁한 신안군의 양보를 통해 단일 후보지를 내도록 한 전남도의 조정 능력과 신안군의 배려 또한 입지 선정에 영향을 줬다.

한국섬진흥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올 8월 목포시 삼학도에 정원 50명 규모의 조직으로 출범 예정이다. 운영비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충당된다. 주요 업무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지원 및 평가, 진흥, 섬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국섬진흥원 유치는 도민과 섬 주민들이 간절한 의지와 열의를 담아 응원해 이뤄낸 쾌거"라며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계기로 섬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힘껏 노력하고, 섬 주민의 교통기반권과 정주기반을 확충해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준 목포시민과 200만 전남도민께 감사드리고, 한국섬진흥원에 대한민국의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국 3300여개 섬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정책을 수립할 한국섬진흥원이 오는 8월 목포 삼학도에 들어선다. 사진은 목포 유달산에서 내려다 본 삼학도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에 '서남권 허브 공항' 건설 광주 군공항 재배치 동시 추진을

민주당-광주시 당정협의

정부가 지원하는 가덕도 '동남권 허브 공항'처럼 전남에 '서남권 허브 공항'을 건설하고, 광주군 공항도 재배치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영남권에 치우치고 있어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문제를 '전남에 서남권 허브 공항을 짓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당정협의'에서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특별법을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장기간 교착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풀어나기 위해선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서남권 허브 공항 건설과 군공항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민간공항은 수도권-동남권에 대응할 수 있는 서남권 허브공항으로 건설하며 군공항은 지역의 주도적 의사를 반영해 입지를 결정하자"고 설명했다.

또 "군공항 재배치지역·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전공항부지 활용 등 전체적인 재배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군공항이

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 의견 수렴부터 결정까지 공동의 힘으로 진행하자"면서 "이를 위해 향후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가)광주-전남상생발전을 위한 공항 재배치 방안 토론회도 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대선 공약 발걸을 위한 모임을 상시적으로 열고,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심각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문 대통령, 청와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6, 8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대화·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19 연쇄감염 계속 ▶2면

류현진, 양키스 상대로 'ML 60승'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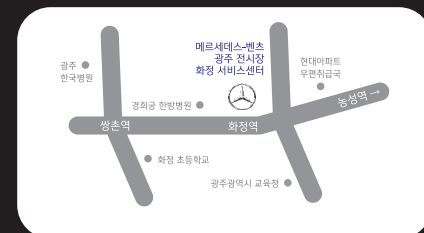


신 팔도명물 - 살도 알도 팍 찬 태안 꽃게 ▶22면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₂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외에는 국내 시판과 다를 수 있습니다.